

01. ① 02. ① 03. ④ 04. ④ 05. ④ 06. ② 07. ③ 08. ② 09. ③ 10. ②
11. ⑤ 12. ① 13. ② 14. ⑤ 15. ① 16. ⑤ 17. ③ 18. ④ 19. ① 20. ①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 좁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회의 국정 감사권 행사를 정치로 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국가의 의사 결정 활동과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의 의사 결정 활동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공권력 행사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 법치주의의 유형 특징 비교

정답 해설 :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통치자를 법에 구속시킴으로써 행정 작용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법률에 근거한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법치주의의 유형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 ③ 공포되지 않은 법률은 형식적인 법적 절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공포되지 않은 법률에 따른 통치 행위는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한다.
-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자유와 평등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국가 권력의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는 국제 평화주의이고, B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④ 재외 국민에게 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

에 해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 ②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전 포고권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 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모두 국내법의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4. 기본권 유형의 특징 비교

정답 해설 : 기본권 유형 중 A는 청구권이고, B는 평등권이다. (가)는 법의 이념 중 법적 안정성이다. 나.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ㄴ. 법적 안정성은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며 쉽게 변경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 ㄷ.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의 이념은 합목적성이다.

5.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정답 해설 : 갑국에서는 t 시기에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있는데 행정부 수반이 의회 제1당 소속이 아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있으면 단독 내각이 성립되므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과 의회 제1당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갑국의 t 시기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마찬가지로 을국에서 t+1 시기에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데 행정부 수반이 의회 제1당 소속이 아니므로 을국의 t+1 시기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주어진 자료를 고려하여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를 다음과 같이 2개의 경우로 나타낼 수 있다.

구분	갑국	을국	또는	구분	갑국	을국
t 시기	대통령제	대통령제		t 시기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t+1 시기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t+1 시기	대통령제	대통령제
t+2 시기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t+2 시기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 ④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갑국의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이 경우에 을국의 t+2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을국의 t+2 시기에는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있으므로 의회 제1당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에 들어갈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t 시기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이 없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갑국의 t+1 시기가 대통령제라면 을국의 t 시기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을국에서 t+1 시기와 t+2 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 t+1 시기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⑤ t+2 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다르다면 t 시기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우리나라 지방 자치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기관 중 A는 지방 의회이고,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 ③ ○○시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 ④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⑤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권은 지방 의회가 갖는다.

7.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비교

정답 해설 :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시민 단체이고, B는 이익 집단이고, C는 정당이다. ③ 정치적 총원 기능을 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 ② 이익 집단은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니다.
- ④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은 모두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8.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ㄴ. 검사는 을에 대하여 공소 제기를 하였으므로 을의 절도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요건 판단 시 위법성과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ㄱ.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검사는 기소 유예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소 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기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ㄴ. 병이 을을 붙잡은 행위는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9.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정답 해설 : ㄴ. A는 자신의 용돈을 빌려주었으므로 A의 법정 대리인이 A의 행위 능력 제한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ㄷ. A와 D 사이 및 B와 D 사이에서는 모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었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D가 A에게 보낸 감사의 메시지는 승낙의 의사 표시가 아니다. A가 돈을 빌려줄 의도로 D에게 용돈 10만 원을 이체한 것이 승낙의 의사 표시이다.

ㄹ. C와 D 간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C는 D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0. 근로자 권리 구제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②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당사자는 ○○회사이고,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갑이다. 따라서 중앙 노동 위원회와 달리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이다.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갑이다.

④ 사례에 근로 3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 3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여야 노동조합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1.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정답 해설 : ㄷ.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ㄹ.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며 국제 재판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도로 교통법’은 국내법이므로 주권 국가인 우리나라의 공식적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이므로 주권 국가의 공식적 입법 기관에서 제정되지 않았다.

ㄴ. 국제법적 근거는 국제 관습법에서 조약으로 구체화되는 것이지 조약에서 국제 관습법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다.

12.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권한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국회, B는 대법원, C는 대통령, D는 국무 위원, E는 국무총리이다. 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에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 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따라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대법원장은 헌법 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다.
- ③ 대통령이 국회로 환부한 법률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은 모두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민법의 기본 원칙 중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②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 간 힘의 균형과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소유권 공공 복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③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④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⑤ 민법의 기본 원칙은 재판 규범으로 기능한다.

14.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정답 해설 : A는 헌법 재판소, B는 법원이다. ⑤ 갑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을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을이 청구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하는 헌법 기관은 대법원이다.
- ② 법원의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서도 파면될 수 있다.
- ③ 법원은 국민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 ④ 을은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하였다.

15. 선거 제도 분석

정답 해설 : t년과 t+4년에는 임기 2년인 의회 의원 선거가 있고, t+2년과 t+6년에는

임기 4년인 의회 의원 선거가 있다. A당만을 기준으로 하면 t+2년 대비 t+4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의 당선자 수는 10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a' - b'' = 10$ 임을 의미한다. $a' + b'' = 120$ 이므로 a' 는 65이고 b'' 는 55이다. 따라서 b' 은 95, a 는 65가 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의석수 (석)	구분	임기 4년	임기 2년	합계
	초대의회	a	b	
	t년	a(65)	b'(95) - 선거	160
	t+2년	a'(65) - 선거	b'(95)	160
	t+4년	a'(65)	b''(55) - 선거	120
	t+6년	a'' - 선거	b''(55)	

같은 방법으로 모든 정당의 선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의석 수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임기	4년	2년	합	4년	2년	합	4년	2년	합	4년	2년	합
	t년	65	95	160	35	5	40	45	35	80	55	65	120
	t+2년	65	95	160	15	5	20	25	35	60	95	65	160
	t+4년	65	55	120	15	5	20	25	35	60	95	105	200
	t+6년		55			5			35		100	105	205

ㄱ. t년 대비 t+2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수가 감소한 정당은 A당(95→65)과 C당(35→25)이다. B당(5→15)과 D당(65→95)은 증가하였다.

ㄴ. B당의 t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자 수는 5명이고, t+4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자 수도 5명이다. C당의 t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자 수는 35명이고, t+4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자 수도 35명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t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체 선거구 중 절반이 넘는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이 있다. 만약 소선거구제라면 의회 의석률이 50%를 넘는 정당이 있어야 하는데 제1당인 A당의 의석 점유율이 40%이다. 따라서 현행 갑국의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며, 각 선거구마다 각 정당은 2명 이상을 공천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는 현행에서도 나타난다.

ㄹ. t+6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개편안 2>가 적용되고, D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이 50%라면 t+6년 D당의 당선자 수는 100명(=200×0.5)이다. 따라서 D당의 전체 의석수는 205석이 되어 D당은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16.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 중 A는 성문 법률주의이고, B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고, C는 명확성의 원칙이다. ⑤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모두 범죄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벌의 내용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형벌 법규에 처벌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의 법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 ② 입법자가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형벌이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 ③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이다.
- ④ 성문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모두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원칙이다.

17.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고, B는 총회이고,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총회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총회는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안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당사국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다.
- ④ 9개국 이상이 찬성하였으나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중 1개 이상의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의안은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에 관한 것이다.
- ⑤ 총회에서의 표결은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18.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④ 수사가 개시되는 고소는 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관인 경찰에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체포 영장과 달리 구속 영장의 발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가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갇이 15세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필요성이 있으면 기소하지 않고 관할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 ③ 구속 적부 심사 청구는 기소 전 피의자 신분에서 가능하다.
- ⑤ 선고 유예 판결은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9. 가족 관계와 법 이해

정답 해설 : ① 원칙적으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하지만 사례에서는 C가 갇을 친양자로 입양했더라도 C의 배우자가 갇의 친부이므로 갇과 친부인 A 간에는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을은 A와 C가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입양 시부터 A와 C의 친생

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③ 을과 E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E와 F의 혼인 이후에 을에 대한 E의 면접 교섭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E와 F의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다.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이다.

⑤ E는 병을 인지하지 않았으므로 E와 병 간에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E가 사망하더라도 병은 E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20. 특수 불법 행위 이해

정답 해설 : ① 사실혼 관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F도 D와 E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E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D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E와 F 사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D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E와 F는 D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을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을의 감독 의무자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때 감독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친권자를 의미한다. A와 C가 D의 자녀 을을 입양하였기 때문에 을에 대한 친권은 D가 아닌 A와 C가 갖는다.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A, C가 부담한다.

③ 갑의 Y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Y의 훼손된 옷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 X가 종업원 갑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갑이 Y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X가 출입구 파손으로 발생 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도 공작물 소유자인 X는 Y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